

보도	2022.11.30.(수) 조간	배포	2022.11.29.(화)		
담당 부서	법무실 은행팀	책임자	팀 장	정은정	(02-3145-5912)
		담당자	선임조사역	정연정	(02-3145-5914)

「FSS, the F.A.S.T.」 프로젝트 #04 관련 후속조치
 - 비조치의견서 신속처리를 통한 예측가능성 · 투명성 제고 실천방안 -

**금융회사의 창의적 금융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
비조치의견서를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.**

주 요 내 용

- 비조치의견서의 신청 前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·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, 신청 後에도 담당부서 배정기한(5영업일) 도입, 관련부서장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책임감 있게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.
- 특히 복잡한 사안은 비조치의견서 심의회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, 최근 IT 분야의 신청 급증에 대응하여 IT 전문가를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겠습니다.

1. 추진 배경

-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창의적 금융활동 지원 및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비조치의견서*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,
 - * (개념) 금감원장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」 §2)
 - (현황) 최근 5년간('17.~'21.) 연 평균 76건 접수·55건 회신 // '22년 1~10월 76건 접수·44건 회신
- 사전협의 단계에서 지연되거나, 접수된 후에도 금융회사의 신청내용이 다수부서 관련사안 또는 사실관계·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회신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 추진*
- * 「FSS, the F.A.S.T.」 프로젝트 중 “금융감독업무 예측가능성 제고 및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('22.11.15.)”의 후속조치

2. 개선방안

1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·관리하는 체계 수립

- (현행) 금융회사가 비조치의견서를 금감원에 정식 신청하기 前 사전 협의하는 경우 금감원 내부보고 미흡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 존재
- (개선) 금감원 담당부서는 **사전협의 요청시** 지체 없이 **부서장**에게 **보고**하고, **비조치의견서 운영부서**(법무실)에도 **통보***하는 등 사전 협의 단계부터 보고·관리체계를 마련하여 **사전협의 기간 단축**
 - * 사전협의 요청일·요청자, 담당부서, 사전협의 내용, 보고일·보고대상자 등
- 특히 **중요사안**의 경우 부서장은 **담당 임원**에게도 사전협의 내용 등을 **신속히 보고**

2 빠른 담당부서 결정을 통해 처리의 신속성 제고

- (현행) 금감원의 비조치의견서 접수 이후에도 다수부서 관련사안 등의 경우 담당부서 결정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처리가 지연
 - 또한, 금감원은 법규상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*을 준수**하고 있으나,
 - * 담당부서 배정 이후 30일(영업일) 이내 회신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」 §6⑧)
 - ** (담당부서 배정 후 회신까지 평균 처리기간) 최근 5년(17.~21)간 : 26영업일, '22년 1~10월중 : 17영업일
 - 금융회사는 금감원 배정이 아닌 금융위 신청시점*부터 비조치의견서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처리가 지연된다고 오인할 소지
 - * 비조치의견서 접수창구는 **금융위로 일원화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」 §5①) 되어 있고, 금융위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**금감원으로 이첩·배정**
- (개선) **다수부서 관련사안**의 경우 **부서장(부원장보)** 협의체를 통해 담당부서 등을 신속히 결정
 - 또한, 금융위 이첩일로부터 **5영업일**(부득이한 경우 7영업일) 이내 **담당 부서를 신속히 배정**하여 **비조치의견서를 신속히 처리**

3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결론 도출

- ☐ (현행) 선례가 없거나, 쟁점사항 복잡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 존재
- ☐ (개선) 배정 후 **20영업일 내 처리가 지연**될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장(기획·경영 補)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의회에 부의하여 처리
 - 심의회를 전체회의·소회의로 이원화하고, 다수부서 관련사안 중 사실관계·쟁점 간명 등의 경우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**소회의**에서 심의

4 IT 전문가의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근거 마련

- ☐ (현행) 최근 IT 분야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급증*하고 있음에도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 중 IT 전문가 부재
 - * 최근 3년간, 총 회신건수 180건 중 IT분야가 76건(42%)
- ☐ (개선) IT 분야 회신의 적시성·충실성 확보를 위해 **IT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추가 위촉**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증원(3인→4인)

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운영 관련 비교

구 분	현 행	개 선	
		전체회의	소회의(新設)
위원회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원장(기획·경영 補) • 법률자문관, 감총국장, 금소총국장 등 3인 	(좌 동)	(좌 동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부위원 3인 	• 외부위원 4인(기존 3인+IT 전문가)	-
심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실관계·쟁점 복잡 • 다수부서 관련사안 • 기존 회신사례와 차이 • 위원장 부의 안건 	(좌 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수부서 관련사안 중 사실관계·쟁점 간명 • 위원장 부의 안건

3. 향후 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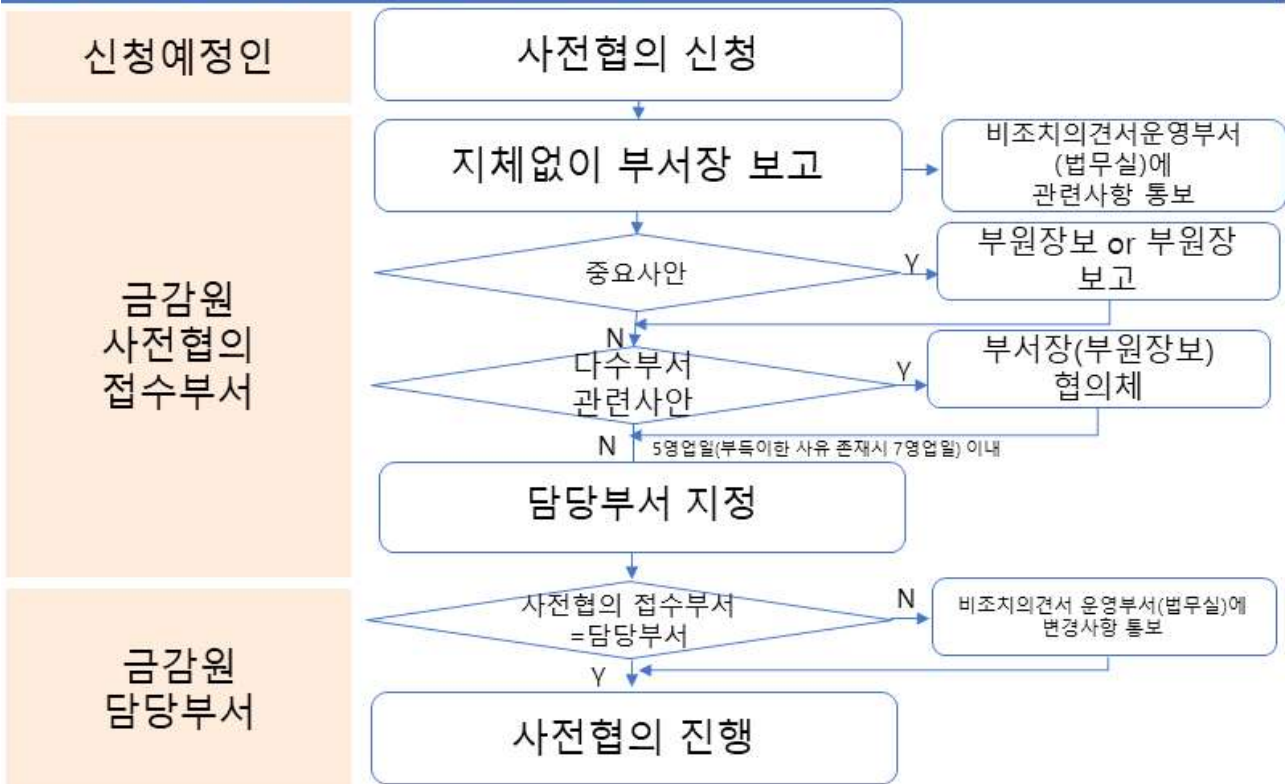
- ☐ 「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」 개정을 위한 사전예고 (11.30.~12.10.) 실시 후, 동 규정 개정 및 IT 외부위원 위촉 추진(12월중)
 - ※ 사전예고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內 '금감원 소개 / 경영정보공개 / 12-2 정관 및 내부규정 제·개정 예고'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☞ (붙임1) 비조치의견서 제도 개선 이후의 업무처리 절차
- (붙임2) 비조치의견서 제도 개선 관련 Q&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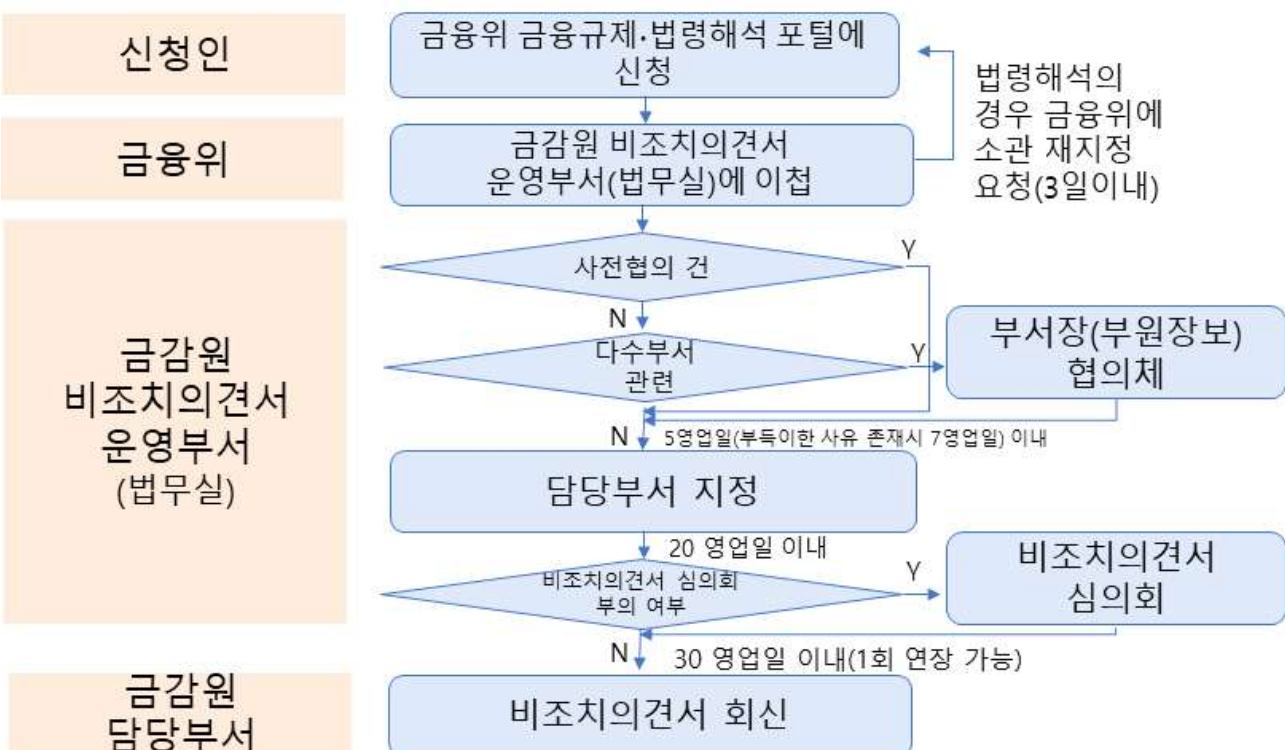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붙임1 비조치의견서 제도 개선 이후의 업무처리 절차

1 사전협의 단계(정식 신청 이전)



2 정식 신청 이후 단계



1. 금번 제도개선으로 인한 처리기간 단축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?

- ☐ 비조치의견서 신청 前 사전협의 단계에서 내부보고 및 관리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전협의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 마련
 - 특히, 그간 비조치의견서 회신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던 담당부서 배정과 관련하여 배정기한(5영업일 원칙), 관련부서장 협의체 등을 통한 결정 등으로 비조치의견서가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
- ☐ 다만, 現 단계에서 비조치의견서의 처리기간 단축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기는 곤란(그간 사전협의 단계에 대한 공식적 관리 부재 등 감안)

2. 사전협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?

- ☐ 비조치의견서 신청 예정인이 금융위의 「금융규제·법령해석 포털(better.fsc.go.kr/fsc_new)」을 통해 비조치의견서를 정식으로 요청하기 전에,
 - ①사실관계, ②관련 법령, ③신청 예정인의 의견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금감원 직원과 사전에 협의(구두, 서면 등)하는 것을 의미

3. 비조치의견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할 경우 오히려 비조치의견서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?

- ☐ 비조치의견서 운영부서(법무실)에서 20영업일 내 처리가 어려운 사정 존재시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장(기획·경영 補)에게 부의를 건의하는 등 담당부서의 비조치의견서 처리상황 등을 관리하고,
 - IT 외부위원 등의 자문의견 청취, 소회의(다수부서 관련사안 중 사실관계·쟁점 간명·위원장 부의 안건 심의)를 적극 활용할 경우 회신의 충실성 뿐만 아니라 신속성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